우암학원 창학66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세계로 앞서가는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RADIANT XROSSOVER NEW GENERATION RX 발견하라. 감동하라
www.hyosunglexus.com
LEXUS
광주전시장 080-384-7733
전주전시장 080-263-7743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333호 1판 (음력 8월 22일) 2016년 9월 22일 목요일

몸 사리는 공무원들 "무조건 조심"

'김영란법' 시행 일주일 앞 … 혹시나 '본보기'에 걸릴까 긴장

법 내용·허용 범위 등 내부교육 … 명확하지 않은 규정에 혼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역 관가와 교육계, 언론계 등은 아직까지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김영란법을 준수하기 위해 법의 내용과 허용 범위 등에 대한 내부 교육 등으로 법 시행에 대비를 하고는 있지만, 명확하지 않은 세부규정과 법 해석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지역 관가에 따르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공무원들은 겉으로 차분한 입장이지만, 해당 법 적용 범위가 워낙 넓고 예외 규정도 모호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달 중순부터 산하기관, 각 기초단체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전문가 초빙 특별강의를 잇따라 개최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청탁 금지법 시행의 주요 내용, 적용대상 판단 기준, 위법 사례 등 대비차원에서다. 알기쉽도록 관련 책자를 발행해 배포하기도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외부 방문객에게 주는 기념품을 저가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고심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외부에서 방문하는 공직자나 교수 등에게 주던 5만 원짜리 이상의 기념품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상당수 공무원들은 "당분간 무조건 조심하고 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적용범위 등이 광범위한데다 모호한 부분이 많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법 시행 초기 많은 혼란이 불가해질 보여 올해 연말까지는 지켜봐야 어느 정도 기준선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 사이에선 법 시행 초기에 혹시나 '시범 케이스'에 걸리지 않을까 긴장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전남도 공무원 B씨는 "공직사회가 보수적이어서 첫 사례로 이름 올릴까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아무래도 법이 시행되면 사람 만나는 것은 상당히 위축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공무원들은 평소처럼 청렴수칙을 따르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일부에선 투명성 제고의 대가로 일부 정책 조정 기능이 약화될 우려를 제기했다. 현실과 접목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대민 접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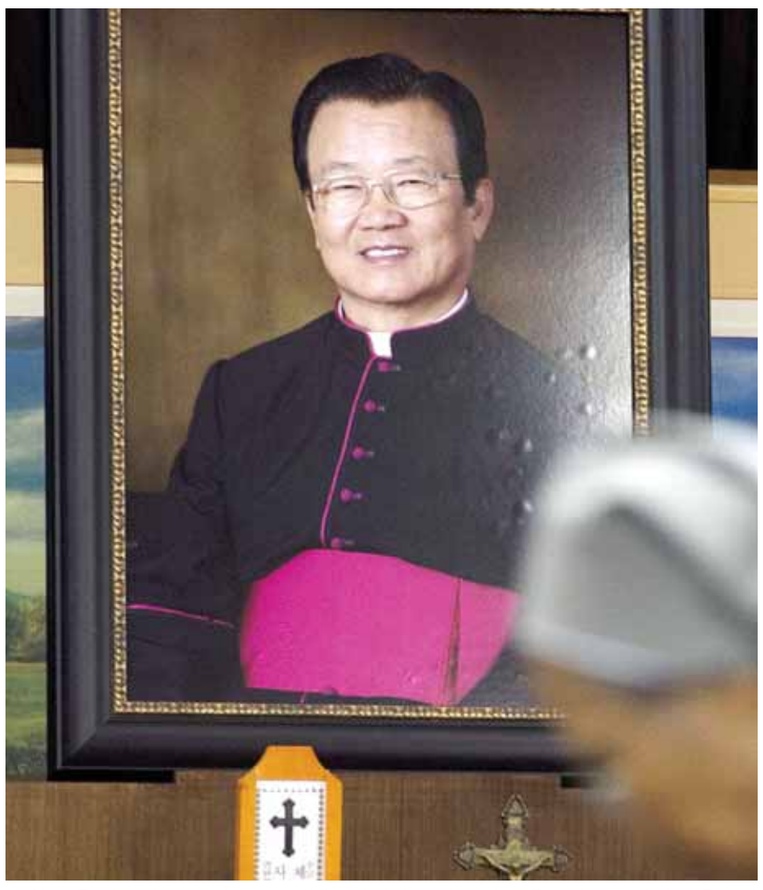
김영란법의 수사 주체인 경찰은 청렴교육과 수사기법 학습으로 분주하다.

'어떻게 수사할 지', '누구를 수사할 지' 메뉴얼을 익히기에 열중이다. 또 자신들도 공무원 신분으로 법 적용 대상인 만큼 청렴교육과 내부감찰도 강화하고 있다. '첫 케이스'에 대한 중압감도 크다.

경찰은 음식점·유흥주점 등 쉽게 노출되는 곳에서의 접대 신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표기하는 등 절차를 거쳐 서면신고를 해야 하는 탓에 신고가 남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경민 전남경찰청장은 "전화신고를 받지 않는 만큼 초창기에는 항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 취지가 신고 양산이나 실적 경쟁이 아닌만큼 '청렴한 사회 만들기'에 경찰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21일 오후 광주시 북구 임동주교좌대성당에서 조비오 신부 추모미사를 마치고 추모객들이 성당지하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추모를 하고 있다. 조 신부는 이날 새벽 3시30분 말기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5월 광주'의 신부 민주화 별이 지다

5·18 수습·명예회복 헌신 조비오 신부 선종

5·18민주화운동의 산 증인이자 광주의 원로인 조비오(본명 조철현) 신부가 21일 새벽 3시30분 말기암으로 선종했다. 향년 78세. 〈관련기사 2·6면〉

천주교 광주대교구에 따르면 조 신부는 약 20일 전 간 등에서 발견된 암세포가 온몸으로 전이돼 말기암 판정을 받았다. 그는 소화자매원 관계자들과 큰 조카인 조영대 용봉동성당 주임신부 등이 병실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눈을 감은 것으로 알려졌다.

1938년 4월1일 광주에서 태어난 조 신부는 1969년 계림동성당에서 서품을 받은 뒤 사제의 길을 걸었다.

1976년 11월부터 1981년 9월까지 계림동성당 주임신부를 맡던 중 5·18 참상을 바로 곁에서 지켜보며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다. 당시 시민수습대책위원으로 활동했던 조 신부는 신군부에 의해 체포돼 고(故)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또 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협의회 의장, 5·18기념재단 초대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5·18 상처를 치유하는데 앞장섰다.

지난 1989년 열린 5·18 진상규명 국회 청문회에서 "신부인 나조차도 손에 총이 있으면 쏘고 싶었다"고 한 증언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2006년 8월 풍암동성당 주임신부를 끝으로 38년간의 사목생활을 은퇴했으며, 이후에도 봉사하는 삶에 전념했다. 계림동 주임신부 시절 인연을 맺은 사회복지법인 소화자매원 이사장을 맡아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했다. 또 초대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장,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조선대학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2008년에는 우리나라에서 28번째로 천주교 명예 고위 성직자이자 교황의 명예 전속 사제인 '몬시뇰'에 임명됐다.

조 신부는 병마가 악화된 가운데서도 지난 5월 제3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지난 7월 광주시가 개최한 지역 원로회의에 참석하는 등 왕성한 사회활동을 해왔다.

빈소는 광주 임동주교좌대성당 지하강당에 마련됐으며 3일장으로 치러진다. 23일 오전 10시 김희중 대주교의 집전으로 임동성당에서 장례미사가 봉헌되며, 장지는 담양군 천주교공원묘원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또 통학버스 사고 … 잇단 악재
바람 잘 날 없는 광주시교육청 ▶7면

숲 속의 전남
담양 용오름마을·구례 호국숲 ▶18면

KIA 호랑이굴 돌아온 김선빈
"팬들의 함성 그리웠다"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 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재난 대피시설 대부분 지하 … 지진엔 무용지물

광주·전남 전시 대비에 초점
주민들 대피소 위치 잘 몰라
대부분 야외…대피엔 부적합

최근 경북 경주에서 강진과 여진이 잇따르면서 지진대피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은 지진 대피시설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전남에 마련된 대피장소는 적기 공습 등 폭격에 초점이 맞춰진 지하시설로, 지진발생 때 지하로 대피할 경우 오히려 더 큰 인명피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지진 발생 시 안전하게 몸을 맡길 수 있는 대피시설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현재 비상대피시설은 광주 123곳, 전남 1313곳 등 모두 1436곳이다. 이들 시설 중에는 지진피해에 대비해 만든 시설도 일부 있지만 대다수는 민방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따라 적기·미사일·화생방 공격 등에 대비해 만든 지하시설로, 지진 발생 땐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지진 발생 시 지하로 대피할 경우 오히려 더 큰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엔 학교 강당·급식실 또는 동(洞) 주민센터 등 지상에 지어진 대피시설이 대부분이지만 지역민들이 대피소 위치 등을 몰라 비상사태 발생시 대피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또 일부 대피소가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 등 야외에 지정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야외공간이다 보니 날씨가 추운 겨울이나, 지진으로 유해물질 누출 등이 있으면 일정 기간 안전하게 대피할 장소로는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내에 지정된 대피소는 민방위 비상대피시설로, 지진이나 홍수 등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비하기엔 제한적인 게 현실"이라며 "국민안전처에서 지진 등 재난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이나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 등을 제작 중"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재난 문자 10초 내 전송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21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열고 잇단 지진으로 피해를 본 경북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긴급 재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일본과 같은 수준인 사고 발생 10초 이내에 발송 완료되도록 재난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를 거쳐 국민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데, 앞으로는 기상청에서 곧바로 국민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

당정청은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정비와 예산 증액을 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